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0. 31.(금) 10:00  
(지면) 2025. 10. 31.(금) 석간

##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,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

- 지역사랑상품권 수요 신설,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
- 사회연대경제 수요 신설을 통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
- 탄소중립·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,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·군 지원 보강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0월 31일(금) 지방교부세위원회\*를 개최하고, ‘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’을 확정했다.

\* (근거)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/ (기능)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방향 등 심의·자문  
(구성) 총 21명 / 지방재정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인 및 정부위원 2인

□ 보통교부세\*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,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\* 보통교부세 총액은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라 내국세의 19.24% 중 97%로 정해져 있으며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61조 7천억 원 규모

○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‘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’을 목표로, ▲지역경제·민생회복 선도적 지원, ▲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, ▲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 성장 실현, ▲기후환경·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.

### ① 지역경제·민생회복 선도적 지원

○ 먼저,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 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\*하고,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.

\* (현행) 지자체별 소상공인 수에 비례 → (개선) 지자체별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에 비례

- 또한,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,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%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('27년~)으로, 비수도권(20%)과 인구 감소지역(30%)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하여 지원한다.
- 석유화학,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·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.

## ② 포용 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

-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,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\*는 과감히 폐지하고,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.
  - \*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값에 비해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교부액 감소
-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\*도 신설할 계획('27년~)이다.
  - \* 사회연대경제조직(사회적기업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) 종사자 수 등 반영

## ③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

-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보강(10→20%)하고,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\*을 두었다.
  - \* (현행) 지방세 감면액의 300% → (개선) 100%(수도권)/300%(비수도권)/500%(인구감소지역)
- 또한,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\*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\*\*한다.
  - \*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수에 체류인구(통근·통학·관광 등으로 방문하여 월 1회,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)를 포함한 개념
  - \*\* (현행) 유동인구 20% / (개선안) 생활인구 10%('26~)

#### ④ 기후환경·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

○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,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·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\* 하는 한편,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확대(20→30%) 한다.

\* (현행) 대기환경 투자(2%), 신재생에너지 생산량(3%) → (개선) 투자(4%), 신재생에너지(6%)

○ 또한,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할하는 시·군 중 시·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·군에도 다른 인접 시·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.

□ 오늘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」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,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,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
○ “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,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	책임자	과 장	진선주 (044-205-37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현 (044-205-3754)



구분	항목	개선 예시
① 지역경제·민생회복 선도적 지원	고용감소지역 보정수요	(현행) '25년 일몰 (개선) '27년 일몰
	지역사랑상품권 보정수요	(신설) 상품권 발행 비용(결산분, 국비 제외) × 10~30% '27년부터 적용
	소상공인 보정수요	(현행) 소상공인 수 기준 산업경제비 × 20%, '25년 일몰 (개선) 소상공인 관련 일반재원 × 50%, '28년 일몰
②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	사회연대경제 보정수요	(신설) 사회연대기업 종사자수×기업수 비중, '27년부터 적용
	현금성복지 경비 자체노력	(현행)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(개선) 페널티 폐지
	청년인구 비율 보정수요	(현행) 청년 수 기준 보건사회복지비 지원 (개선) 청년인구 비율 가중치 반영, 일몰 폐지
③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	특별지방자치단체 보정수요	(현행)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부담금 × 10%, '26년 일몰 (개선)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부담금 × 20%, '29년 일몰
	기업 지방이전 보정수요	(현행) 지방세 감면액 × 300%, '25년 일몰 (개선) 지방세 감면액 × 100~500%, '27년 일몰
	생활인구 보정수요	(신설)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수 반영('26년 시행)
④ 기후환경·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	기후에너지 보정수요	(현행) 미세먼지 수요, '25년 일몰 (개선) 기후에너지 수요*, '28년 일몰 * 대기·환경보호 투자(+2%p),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(+3%p)
	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보정수요	(신설) 원전 소재지 비상계획구역 배분금액(결산액)을 원전 미소재지 비상계획구역에 지원
	재해복구 대응 보정수요	(현행)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·면적 × 20% (개선)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·면적 × 30%
⑤ 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	지방세 체납액 축소 자체노력	(현행) 지방세 체납액에 밀반입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(개선) 지방세 체납액에 밀반입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
	버스재정지원 보정수요	(현행) '25년 일몰 (개선) '27년 일몰